

[기고문] ESG경영 실천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 필요성

By 관리자 승인: 2023.12.20 - 13:31



전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불고 있다. ESG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and Governance(지배구조)의 줄임말이다.

즉, ESG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책임성 그리고 이를 위한 실행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개념이다.

기업가치를 재무적 수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지표로도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ESG를 실천하면 기업의 수익에 반한다고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ESG 경영을 실천할 경우 오히려 성과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환경오염, 인권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불매운동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협의의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쓰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의의 거버넌스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견수렴으로 도달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광의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기업인 나이키는 아동노동력 착취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협력사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한 바 있다.

본사는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을 할 뿐 생산은 협력사에서 진행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아동노동 착취에 대한 방조의 책임이 있어 매출은 급감했다.

고민 끝에 나이키는 1998년 기업 책임부를 신설해 안전과 건강, 인력개발, 환경 등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환경과 청년 노동자 교육훈련 환경 개선에 힘쓰는 노동자를 위한 국제연대를 창립하는 데 기여했고 이후 나이키의 매출은 회복됐다.

이처럼 ESG경영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지사도 시대에 흐름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구축, 즉 의사결정 과정 개선을 통해 실적을 낸 사례가 있다.

우리 지사는 지난 8월에 경주시와 협의해 도로 공사로 야기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경감시키고 지사와 경주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렴하고 이를 실천한 바 있다.

우리 지사는 경주시 양남면에서 효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용수관로 노선 설치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직면했다.

때마침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근 국도 부지의 상수도 공사 구간이 지사의 사업구간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주시청과 협의를 진행해 용수관로 매설부지를 개인의 지상권에 침해를 주지 않는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는 국도부지로 우회해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중복 구간에 대해 두 번의 도로굴착이 될 수 있는 공사를 두 기관이 함께 공사를 진행해 한 번의 굴착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도로포장재 절감에 따른 탄소 발생 저감효과, 공사구간을 국도로 대체함에 따른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약 1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ESG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내부적 의사결정에만 집중했다면 우물 안에 갇혀 이와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는 시대에 발 맞추어 협업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과거에 비해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과 지자체, 시민단체간 관계 강화가 중시되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바라보려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 배척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 및 지원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가진 유관 기관을 찾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다방면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는 윤리적 의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며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개인의 인식,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소통의 장이 조화롭게 갖추어진다면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과 기업, 정부와 기업 등이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